

---

## 새로운 교육 아젠다의 과제

이네스 두셀

교육학 박사. 멕시코 고등 연구센터 교육연구부 전임연구원

---

원제와 출처: Inés Dussel, “Deudas y desafíos de una nueva agenda en educación”, *Nueva Sociedad*, No. 257, julio-agosto de 2015, pp. 65-76.

핵심어: 교육자, 교육, 학교, 신기술,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교육자이자 신학자인 이반 일리치는 1968년에 발표한 「라틴아메리카에서 학교의 무용성」에서 교육 확대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있으므로 교육에 소모하는 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리치는 교육제도가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뒤처진 사람들의 순응과 종속을 낳는 하나의 계략이라고 비판한다.<sup>1)</sup> 또 학교는 반민주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비용 사회기관이며, 학교의 가장 큰 폐해는 대중으로부터 분리된 교양 부르주아지를 생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일리치의 관점에서 교육개혁이란 교육을 다양한 기

---

1) Iván Illich, “The Futility of Schooling in Latin America”, *Saturday Review*, 20/4/1968, pp. 57-59 & 74-75.

관(공장, 사회단체, 커뮤니케이션 매체, 2개월 단위의 새로운 학교)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즉, 민주성과 평등성을 극대화하려면 사회를 탈학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치가 그런 주장을 하던 당시 라틴아메리카 인구의 32.6%는 문맹이거나 3년 이하의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sup>2)</sup> 20세기 중반의 포퓰리즘 정부,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 이르러서도 대부분 라틴아메리카인은 초등교육만 이수했을 뿐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초등교육 이수자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교과 내용은 대부분 유럽중심적이고 백과사전적이거나 아니면, 60~70년대 남미남부 지역<sup>3)</sup>의 군부독재 시기 교육이 그랬듯이, 노골적인 반(反)계몽주의였다.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일리치가 지적한 학교의 무용성과는 대조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교육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이다. 2012년 자료에 따르면, 문해율(文解率)이 91.4%에 달하며, 라틴아메리카 청년층의 교육 기간이 13.4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중앙유럽이나 남유럽에 근접한 수치이다. 취학과 관련하여 21세기에는 두 가지 뚜렷한 징후가 나타났다. 하나는 취학 전 교육기관 및 중등학교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다. 먼저, 2013년 중등학교 진학률은 93%에 달했다. 비록 최종 학기에는 그 비율이 하락하지만 말이다. 취학 전 교육기관의 보급률은 2004년 60%에서 2013년 77%로 높아졌다.<sup>4)</sup> 이제는 많은 아동이 학

2) Juan Pablo Terra의 1970년 자료: “Alfabetismo y escolarización básica de los jóvenes en América Latina”, Documento No. 24, Proyecto Desarrollo y Educación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DEALC), UNESCO/ PNUD/ CEPAL, 1981.

3) 남미남부(Cono Sur) 지역이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가리킨다 - 옮긴이.

4) Instituto de Estadística de la UNESCO, *Compendio de la educación global 2012*, UNESCO, Montreal, 2012([www.uis.unesco.org/Education/Documents/ged-2012-en.pdf](http://www.uis.unesco.org/Education/Documents/ged-2012-en.pdf)); Centro de Datos del Instituto de Estadística de la UNESCO([www.uis.unesco.org/DataCentre/Pages/region-profile.aspx?regionocode=40520](http://www.uis.unesco.org/DataCentre/Pages/region-profile.aspx?regionocode=40520))

교에 다니고 있으며, 수학 기간도 늘어났다.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 모든 사람이 교육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중등교육이나 취학 전 교육은 중·상류층의 전유물이었으며, 그 외의 사회 계층에게는 넘볼 수 없는 사치였다. 지금은 다양한 계층에서 취학 인구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예산을 확충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또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족과 공동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초 10년 동안 추진한 사회적·문화적 포용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중도좌파정부나 포퓰리즘 정부가 등장하여,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CEPAL)의 용어로 ‘성 평등’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권이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사회적·정치적 권리로 확대되었다. 어느 도시정책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평등주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이상적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이해하려면 연구할 가치가 있다.<sup>5)</sup>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아셀 리바스는 최근 연구에서 ‘세 방면의 교육권 신장’이 지난 10년간의 특징이라고 지적한다.<sup>6)</sup> 바로 교육 진입과 접근성 향상, 교육재정 증가 그리고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 인정이다. 지난 90년대는 국제신용기관이 아젠다를 장악하고, 교육행정, 교육과정, 평가제도를 개혁했지만, 지금은 그 시대와는 다르다. 특히 의무교육을 11~12세 혹은 13세까지 확대하고 장학금과 각종 지원과 학교 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등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과 취학을 기본 시민권의 일부로 인식함으로써 생겨난 취학 열기가 맞물려 라틴아메리카 취학률은 유례없이 증가했다.

5) Justin McGuirk, *Radical Cities: Across Latin America in Search of a New Architecture*, Verso, Londres-Nueva York, 2014. 스페인어판도 있다. *Ciudades radicales. Un viaje a la nueva arquitectura latinoamericana*, Turner, Madrid, 2015.

6) Axel Rivas, *América Latina después de PISA*, CIPPEC, Buenos Aires, 2015, p.47.

이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전후 시대의 증가 속도에 비견될 정도이다.

그런데도 일리치의 탈학교 담론은 아직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그 동기가 훌륭한 경우도 있다. 교육제도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지만 교육제도의 정통성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10년 전보다 약화되었다. 조지 스타이너가 지적하듯이,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특권에 대한 반격”으로 “전쟁의 함성”과도 같다. 이런 특권으로부터 “수십억 명이 배제되고 있으니” 말이다.<sup>7)</sup>

역사적으로 소수만 교육받고 다수는 교육에서 배제해온 라틴아메리카에서 현재 문제시되는 것은 학교의 형식(조직)과 내용이다. 학교의 목적이 문화 전달이라는 사고는 오늘날 여러모로 도전을 받고 있다. 그 도전이란, 학생 중심의 학습이론, 유럽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정전(canon)에 대한 다문화주의와 다원주의의 비판, 신자유주의가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적인 행정부에 적합한 인재 양성 요구, 신기술 찬양론(학생 스스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학교와 교사가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등이다. 이런 얘기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정책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특히 교사를 관료주의와 조합주의의 이익을 수호하는 사람 또는 문화적 보수주의의 대변자라고 백안시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학교교육 확대는 20세기 40~50년대보다 낙관적이지 않으며,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학교교육 확대 정책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같은 국가에서는 학교의 배타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현대사, 아프리카계의

7) George Steiner y Cécile Ladjali, *Elogio de la transmisión*, Siruela, Madrid, 2005, p.106.

역사와 문화, 원주민의 정치관과 세계관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였다. 또 브라질의 여러 주에서는 교육자와 학생의 대학공동운영제도(cogobierno)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직접 학교 운영진을 뽑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과 개방적인 학교운영은 19세기 말부터 정착된 교육제도의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공통문화와 권위에 대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교육제도를 끌어들이는 일이다. 발터 벤야민이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의 아우라 상실을 지적한 것과 유사하게 교육제도도 교육과정 개편과 개방적인 학교운영으로 탈신성화되고 민주화되었지만, 이러한 시도가 사회적 합의를 얻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 새로운 시도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바꿔 말해서, 정치적 파당성에 휘말리면서 정권교체의 파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일과성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통성 또한 일과적이라는 징후이다. 이전보다 투표가 더 많아지고, 그만큼 정치권력의 정통성 또한 덧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타의 공공정책처럼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8)</sup> 사실 학교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가정, 공동체, 매스컴으로부터는 끊임없이 감시와 압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자유주의 좌파의 반(反)학교 담론은 물론 신자유주의 우파의 반학교 담론도 학교의 활동 반경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최근 10년 동안 진행된 교육권 확대가 정통성을 약화한 데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정치적 요소 외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이 요소는 바로 불평등으로, 최근에 수립된 교육정책의 한계와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불평등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을 일컫었는데, 오늘

8) Zizi Papacharissi, *A Private Sphere: Democracy in a Digital Age*, Polity Press, Cambridge, 2010.

날에는 학교 사이의 간극을 의미하게 되었다. 주간학교와 야간학교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가난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대부분 시설이 부족하고, 교사진도 불안정하고, 교수법도 빈약하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의 결석이다. 이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학교정상화의 최소 요건’이라는 교육정책 목표에 출석을 포함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결석률은 사립학교의 두 배이고, 초등학교의 결석률은 중등학교의 세 배에 달한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중상류층 학생과 하층 학생 사이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의무교육 확대가 반드시 동등한 학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교육권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교육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문맹률이 여전히 30%에 이르는 중미 국가와 고등교육을 개선하고 학교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려는 남미 국가의 과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칠레나 멕시코처럼 평가와 성과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이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국가와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처럼 국가의 주도권이나 공동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가마다 교육 전통이 다르고 행정구조와 노동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해결 방안도 상이하다. 이런 차이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의무교육 연한 확대라는 과제이다.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과 마치는 연령을 앞뒤로 늘리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환경과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인데, 법률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장학금 같은 경제적 지원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확대하려면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학교의 형식

과 내용의 변화가 기본이다. 후안 카를로스 테데스코가 지적하듯, 의무교육은 교육제도, 교과내용, 평가방식, 학칙, 수업방식 등 “다양한 방면에 충격을 준다”<sup>9)</sup>. 한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등교육청 청장을 지낸 클라우디아 브라치가 보기에 의무교육은 학교의 형식을 다시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등교육을 생각한다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학교 조직과 교육과정은 필히 재검토해야 하며, 교육 시간과 장소를 다시 정의하고, 의무성과 보편성의 요구에 맞게 학교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얘기한다.<sup>10)</sup>

이런 맥락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전통적이고 엄격한 현재의 학교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반(反)학교 담론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최근 수십 년간 학교의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고, 전통적인 교육 기능이 이탈하면서 학교도 변하고 있다. 이제 학교는 직업이나 장래(대학교와 무관하게)를 위해 공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되었다. 중등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은 급식비나 장학금 같은 경제적 지원(금전, 수업 자료, 의복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집안문제, 마약문제, 법률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 새로운 인력(상담교사, 양호교사, 후견인)과 외부의 지원망(법원, 미성년자 보호기관, 보건소 등)이 등장하여 학교 활동을 보완하고 있고, 때로는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sup>11)</sup> 종종 다른 기관 사람들도 ‘사실상’ 협력하고 있는데, 이런 활

9) Juan Carlos Tedesco, “Prioridad de las políticas educativas”, en Elena Duro(coord.), *Educación secundaria. Derecho, inclusión y desarrollo. Desafíos para la educación de los adolescentes*, Unifef, Buenos Aires, 2010, p. 41.

10) Cladia Bracchi, “La educación secundaria y el desafío de la obligatoriedad», ponencia presentada en las IV Jornadas sobre el Programa Asignación Universal por Hijo, AAPS/ REDAIC/ AMIA/ Unicef, Buenos Aires, 2010, p. 2.

11) Perla Zelmanovich, “Las paradojas de la inclusión en la escuela media, a partir de una lectura de la

동을 통합하고 감독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학교 외부 기관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권 확대 노력을 저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의 사회적 기능 강화와 교육 기능 이탈은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이 라틴아메리카와 동일하지는 않다.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학교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거나 ‘더불어 살기’를 배우는 여가센터나 주민센터 역할을 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학교 밖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2)</sup> 물론 디지털 기술로 학교 안팎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라는 공간은 의미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사교의 공간, 안전한 공간, 복지의 공간(이런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목적에 포함되지 않았다)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3)</sup>

교육 기능 이탈은 일반적인 문화·사회·정치 변화와 결부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의무교육 확대로 생겨난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무교육 확대는 앞서 언급한 반학교 담론을 부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초에 등장한 ‘지식사회’ 또는 ‘네트워크’라는 말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학교의 형식과 내용을 건드리고 있다. 첫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확립된 분과학문은 새로운 학문분야의 출현과 학제 간 연구의 확산으로 도전받고 있다.

posición de los docentes en el vínculo educativo. Aportes del psicoanálisis a la investigación del malestar en las prácticas socio-educativas”, tesis de doctorado, Flacso-Argentina, Buenos Aires, 2013.

12) OCDE, Background OECD Papers: *The Schooling Scenarios*, International Schooling for Tomorrow Forum,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Toronto, 2004.

13) Katie Wright y Julie McLeod(eds.), *Rethinking Youth Wellbeing: Critical Perspectives*, Springer, Nueva York-Londres, 2014.

둘째, 신기술 보급으로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돌풍처럼 등장하였다. 집단지성은 ‘전문 지식’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대중 취향과 의견(페이스북의 ‘좋아요’나 포털사이트 같은 웹 공간 같은)에 대한 ‘아마추어 숭배’(Cult of the Amateur)를 조장하고 있다.<sup>14)</sup> 지금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메신저 시대에는 짧고 효과적인 구호이나 충격적 이미지가 심오한 논리를 전개하는 복잡한 글보다 더 가치 있는 듯하다. 이처럼 전도된 상황은 교육에도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통적인 분과학문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찾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학과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아마도 학교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향은 학교를 ‘유일한 지식거래소’로 축소하지 않는 것이고,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자유로운 학습활동을 옹호하는 것이며, 또 문화적 참여와 창조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클릭 행위로 환원하지 않는 것이다.

문화적·기술적 변화는 세대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마거릿 미드는 수십 년 전에 ‘전형성적 문화’(prefigurative culture)에 대해 논한 바 있으며, 한나 아렌트는 교육의 위기를 전통적인 권위의 위기로 분석한 바 있다.<sup>15)</sup> 20세기 중반부터 갈수록 많은 청년이 어른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 현실에 적합하고 또 자신들 관심사를 고려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서 자신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학칙과 자신들의 관점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요구 목소리가 등장하리라고는 과거에

14) 앤드류 킨의 저서명. 우리말로는 「인터넷 원숭이들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 옮긴이.

15) Margaret Mead, *Culture and Commitment: A Study of the Generation Gap*, Natural History Museum / Doubleday, Garden City, 1970; Hannah Arendt, “La crisis en la educación”, en *Entre el pasado y el futuro. Ocho ejercicios sobre la reflexión política*, Península, Barcelona, 1996.

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sup>16)</sup> 많은 교사가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든가 민주적인 학칙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런 일은 한두 사람의 노력이나 교사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으므로 교사 양성이나 교육정책의 일부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사가 당면한 문제도 중요하다. 현재 교사는 공무원이자 직업인, 즉 노동자라는 이중성에 갇혀 있다. 바꿔 말해서, 전반적인 고용불안정 속에서 교사의 노동이나 노동조합은 특별대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 관련 노동에 종사하는 직업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교직은 이 모두와 관련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둘 중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 증진 없이 어떻게 교육권을 확대하고, 학습활동을 강화하며, 교육의 윤리적·정치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까? 명쾌한 대답은 없지만, 이 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교사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 노동의 문제, 제도의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와 지식의 민주화라는 공적 사안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교육에 영향을 준 둘째 요소는, 현재까지 시행된 개혁 정책과 전략에 있다. 교육개혁은 수십 년 전부터 일종의 ‘신화적’ 주제였다.<sup>17)</sup> 라틴아메리카는 1980~90년대에 교육제도 개혁을 야심 차게 시도했다. 이 개혁은 초미의 국가적 과제였으므로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

16) 필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청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이 말은 아주 다양한 청년의 경험을 내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사나 레기요는 복합적 차원을 가로지르는 개념으로서 ‘청년의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ossana Reguillo, *Emergencia de culturas juveniles. Estrategias del desencanto*, Norma, Bogotá, 2000).

17) Thomas Popkewitz, Robert Tabachnick y Greg Wehlage, *El mito de la reforma educativa*, Pomares, Barcelona, 2007.

진했다. 이러한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개혁은 학교를 정책 시행의 장으로 여기기 일쑤였고, 교사와 학생이 개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정부 시책을 어긴 것으로 간주했다. 그렇지만 앞서 밝혔듯이, 교육권 확대 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교육은 단 하나의 청사진이나 계획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차원과 역학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교육단계별로 현장을 분석해야 하며, 실제 교육 현장은 “여러 방식의 혼합, 절충적인 해결, 불완전한(또는 분별 있는) 합의”의 공간이지<sup>18)</sup> 중앙정부 논리만이 유일하게 작동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장악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몇몇 경우처럼 학교와 교사의 창의적 활동을 과신해서도 안 된다. 실제 교육현장을 반영한 교육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과 전략을 결합하여 좀 더 광범위한 교육정책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 말은 교육정책을 훨씬 다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교육현장의 정책 수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자체평가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교육정책 수립 과정 또한 지금보다 훨씬 민주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학교는 공동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공립학교의 전통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 이유는 탈학교 담론이 거세지고, 또 여러 가지 동기와 갖가지 방식(예를 들면, 평가나 효율성)으로 공동체에서 학교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는 문화를 재창조하고 전파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공간,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구심점과도 같았는데, 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공동

18) Anne-Marie Chartier, *Enseñar a leer y escribir. Una aproximación históric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D.F., 2004.

체의 구심점이라는 내용은 항상 실험 대상이었는데도 모른다. 시몬 볼리바르의 스승인 시몬 로드리게스(Simón Rodríguez)는 시민이 “공화국을 그려내는 예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호로 그려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sup>19)</sup> 또 글이 해방의 가능성을 담고 있지만 배제의 가능성 또한 담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스페인어 맞춤법을 구어에 가깝게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전통을 물려받은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를 비롯해 많은 교육학자는 학교의 배타적 성격을 비판하고, 지식의 위계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보자면, 교육권이 확대된 지금, 학습의 강도와 심도를 향상하려면 단편적이고 백과사전적인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학과 교수법을 검토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교육과정이 청소년의 관심사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산업(문화와 산업은 갈수록 동일해지고 있다) 시장의 요구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방금 언급한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육학 및 교수법의 검토는 학교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권을 확대하는 방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 학교의 공공성은 특정 정파의 시각에서 판단해서도 안 되며, 특히나 지식의 생산과 전달은 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는 관점에서 판단해서도 안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의 구심점이라는 라틴아메리카 공립학교의 핵심적인 전통은 현시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재창조되고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민 옮김

19) 재인용: Angel Rama, *La crítica de la cultura en América Latina*, Biblioteca Ayacucho, Caracas, 1985, p. 15.